

# 코로나 대유행과 한국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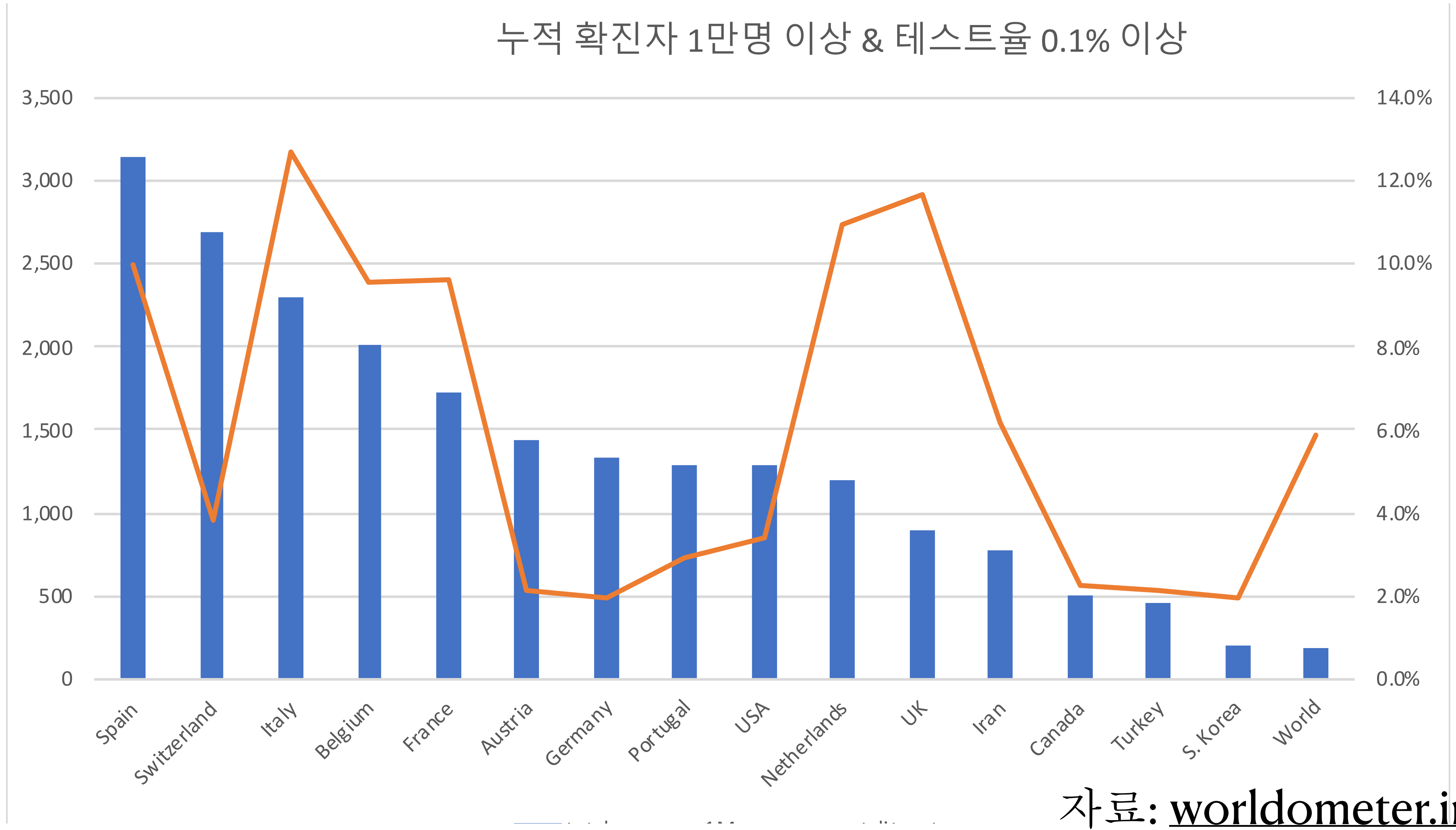
주병기

서울대 경제학부 교수,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장

2020년 4월 10일

# 코로나19 대유행 국가별 현황

누적 확진자 1만명 이상 & 테스트율 0.1% 이상



자료: [worldometer.info](http://worldometer.info)

#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적 충격

- 전세계 150여개국에 4월 9일 현재 약150만명 확진자와 약9만명의 사망자 발생
- 질병 대유행의 경제적 충격으로 비교할만한 사례로 1918-20 스페인 독감: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스페인 독감에 비해 훨씬 작지만 각국의 강력한 방역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충격은 그 때와 비교할 만한 수준. 인명피해의 규모가 작은 것은 방역과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과 방역조치의 선진화의 영향도 있음.
- 세계경제의 질적 변화: 2차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세계무역규모 40배 가까이 증가; 국제적 가치사슬에 따른 국가 간 분업화 -> 코로나 대유행의 경제적 충격의 지역적 범위,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요인
- 따라서 스페인독감의 경제적 충격을 코로나19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경제적 충격의 규모와 국가 별 차이를 가늠하는데 참고할 수 있음.

# 1918-20 스페인 독감 대유행의 교훈

Barro, R., J.F. Ursua, and J. Wang (2020), “Lessons from the “Spanish Flu” for the Coronavirus’s Potential Effects on Mortality and Economic Activity”, online mimeo

- 총 사망자수 : 43개국 추계 3.46(천만) -> 전세계 3.90(천만) 추계
  - 전 세계 인구의 2% 사망 (현재 인구 2%는 약 1억 5천만명)
- 경제적 충격: 국가 평균 일인당 GDP 변화 - 6.0%
  -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평균 일인당 GDP 변화 -8.4%
- 인구대비 독감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에 더 큰 경제적 충격
  - 인구대비 사망자 비율 1% 포인트 늘어날 때, 경제적 충격(인당 GDP) 3% 포인트 감소

-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방역과 질병확산의 추이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함. 그에 따라 경제적 충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
- 국제적 분업구조 속에서 각 국의 주력산업이 입는 타격에 따라 더 중요한 국가별 격차 발생.
- 한국경제, 위기극복의 여건은?
  - 지금까지의 추세로 질병확산이 통제된다면 국내 경제의 정상화가 다른나라들에 비해 빠를 수 있음 -> 경제적 충격 회복에 유리한 여건
  - 주력 산업 부문인 반도체, 화학, 전자 등의 전망 상대적으로 안정적. 반도체, 배터리, 스마트폰, 5G 관련 정보통신 장비 등의 경우 장기적 시장 전망 밝고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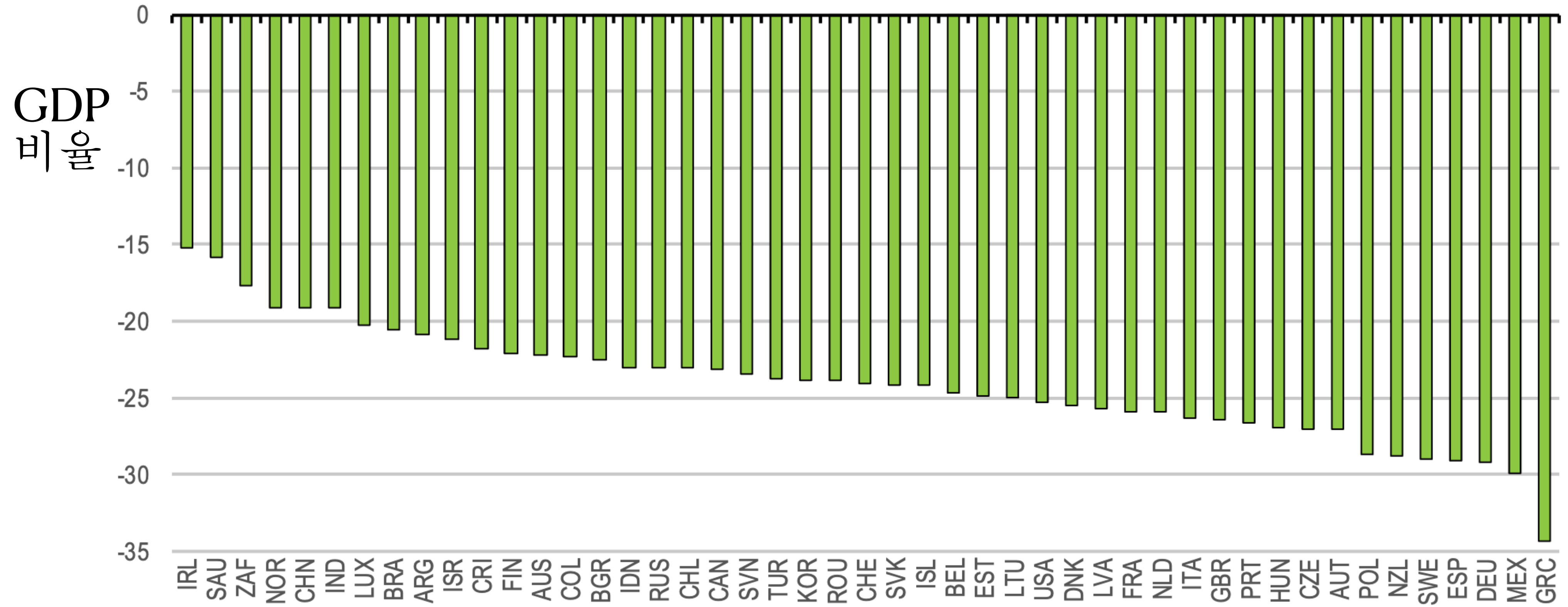
# 코로나19 대유행의 3중 위기

- 3중위기라는 점에서 오일쇼크, 2008년 금융위기 등과 같은 과거 위기와 구별됨.
  - 수요위기: 방역과 격리조치로 인한 수요위축
  - 공급위기: 생산활동이 의존하는 세계적 공급망이 복잡하고 불투명성 (공급차질의 예상의 문제).
  - 금융위기: 기업의 유동성 압박,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단기 자금 조달 압박의 심각성.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
- 재정투입의 국제공조: 재정투입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제 공조 필요. 한 나라의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수입 수요 때문에 반감됨. 국제 공조는 재정투입의 효과를 2배까지 높일 수 있음. G20 국제 공조 필요.

# 경제에 미치는 충격

- ILO, 4월 7일 발간자료: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.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과 전례없는 고용 감소.
- OECD (2020) 3월 27일 발간자료: 엄격한 격리와 거리두기 조치는 매달 연 GDP성장률 2%포인트 감소에 달하는 충격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됨 (그림 참조). 산업 별 영향의 차이와 각국의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충격.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 보다는 충격이 작으나 큰 차이는 없음.
  - 이런 조치가 3개월 지속된다면 연 GDP성장률은 4-6% 감소한다고 볼 수 있음.
  -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-1.7% 성장률 보다 더 큰 폭의 위축 예상.
- 여기서 가정된 산업별 충격이 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에 나타난 결과와 격차가 큼. 한국의 방역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주요 선진국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별 충격은 가정 치 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고 GDP 성장률 감소폭도 이 분석에 나타난 결과보다 작을 것으로 보임.
  - 질병확산이 현재 추세대로 통제된다면 회복 역시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임.
  - 금융위기 때 처럼,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.

## 엄격한 격리 조치가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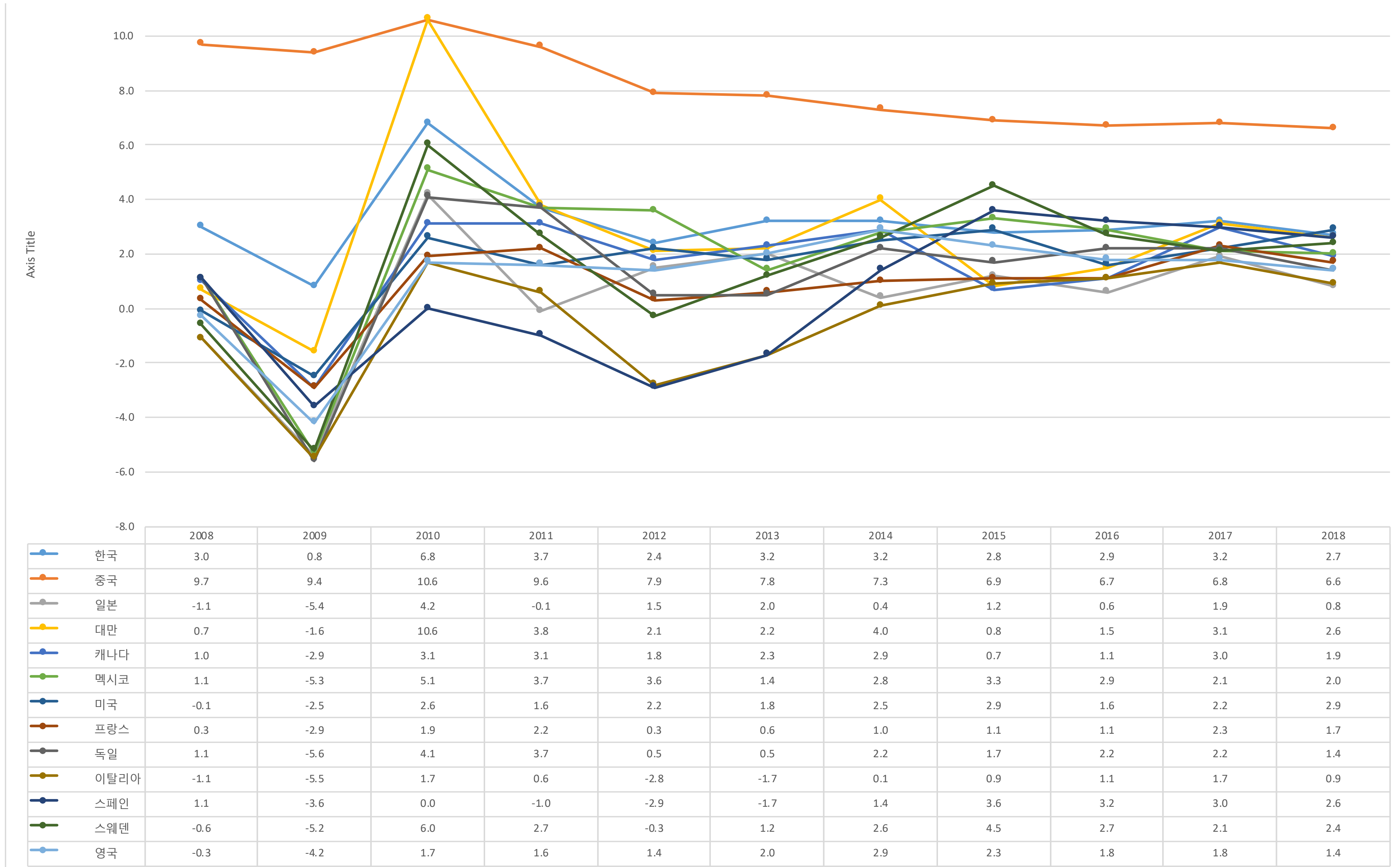
자료: OECD



# 경제성장률 전망

- 국내외의 주요 기관들의 전망도 대체로 이번 사태의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이 될 것이고 한국경제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.
-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과소평가해 온 IMF 전망 수정. IMF 총재 4월 9일 연설문: “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이 확실시됨.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”
-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, 3월 20일 전망: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-1.1, 중국 1.1%, 한국 0.8%
- 신용평가사 Fitch 4월 2일 전망: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-1.9%, 미국-3.3%, 유로존 -4.2%, 중국 1.6%, 한국 -0.2%
- Oxford Economics 세계경제성장률 전망: 각국 봉쇄 6-12주 -> -2.8%, 3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-> -8%
- 독일 전망: 독일 경제연구소(IW) -5%~-10%; 독일 Ifo 경제연구소 -4.2%
- 한국 전망: 한은 금통위 발표는 기존 전망치 2.1%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(1% 미만 가능) “올해 한국 경제는 플러스(+)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1%대는 쉽지 않다”; 한경연 -2.3%

# 2008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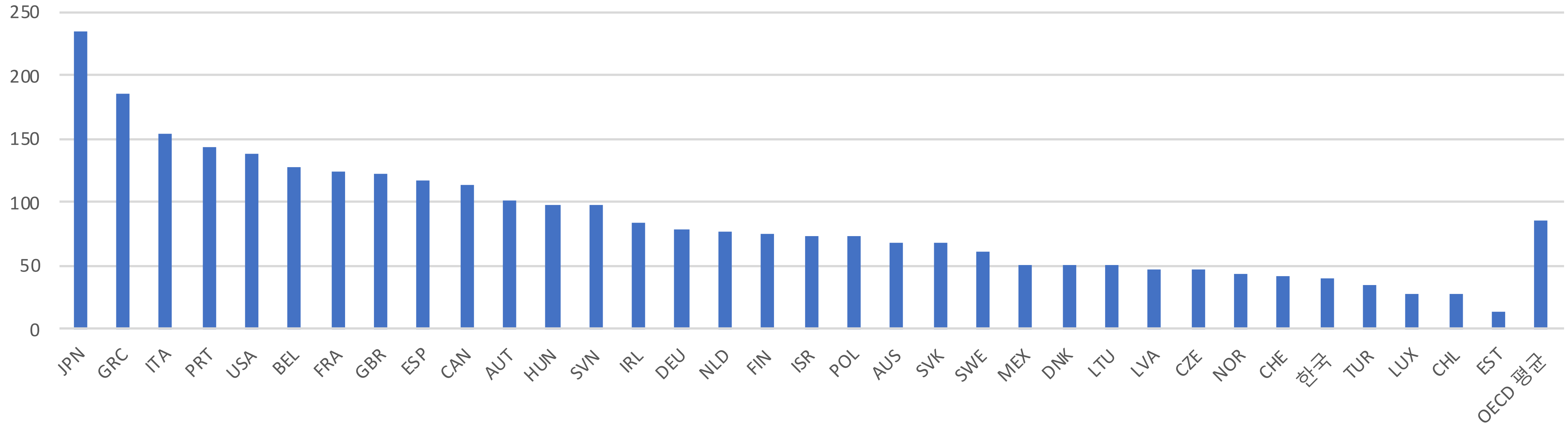
# 장기 전망

- 장기적 회복 전망: 금융위기 당시 중국 경제 8~10% 성장 ->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 동력.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이 1-2년내에 원상복귀.
  - 현재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 비중은 10년 전보다 훨씬 커져 세계경제에서의 영향력은 더 커짐. 중국경제 회복전망 비관적; 올해 성장률이 2%이하일 것이라는 전망 ->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도 어려운 여건
  - 따라서 세계경제가 수축국면에서 회복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! 2008년 금융위기 보다 더 큰 폭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이로 부터의 회복도 늦어질 전망.
- 한국경제의 강점과 약점
  - 강점: 선제적 방역과 질병통제로 얻어진 내수경제 회복 여건 + 긍정적 주력산업 전망
  - 약점: 높은 수출입 의존도와 낮은 내수경기 비중 + 대중국 무역 의존도 + 소재.부품,장비 대외 의존도
- 강점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

# 정책적 대응방안

- 한국: GDP 0.8% (1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예산 16조)
  - 추가 재난지원 9조원 예정이 실행되면 GDP 1.25%
  - 독일 4.9%; 프랑스 2%; 이태리 1.4%; 스페인 1%; 미국 11%
  - 우리 정부의 대응 규모는 작고 시기적으로 늦다. 미국 정부, 우리보다 3주 늦게 문제 인지했으나 재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 시기는 우리와 같음; 더 과감한 재정투입. 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양상. 방역은 우리보다 부실했고 체계적이지 못했지만 정책적 대응은 빠르고 선제적임.
- 재정여력: 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을 악화시킬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고 현재 재정여력이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가장 큰 것은 사실.
  - 100년 주기의 위기대응에 재정여력을 쓰지 않는다면 재정여력의 효용가치는 없음.
  -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회복기에 재정여력 보완해야.

# 국가채무비율 2016년



자료: OECD

# 위기의 양극화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

- 위기 대응 전략의 양 축
  - 위기의 양극화 해소
    - 경제 위기 국면에서 개개인이 겪는 위기의 계층간 양극화. 우리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체계는 이러한 위기의 양극화를 완충하기에 역부족 -> 위기 국면 마다 양극화를 심화 -> 사회통합과 연대성의 상실
    - 경기 순행적인 포용 국가 개혁과제 우선적 추진: 사회복지와 안전망 강화, 관련 공공인력 및 관리 체계 확충, 공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감시.감독기능 강화, 공공부문 투명성 확대와 부패 척결 등.
  - 미래성장잠재력 확충
    - 선제적 산업구조 조정
    - 소재.부품.장비산업 기반 강화
    -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: 보건, 의약품, 온라인 거래/교육/업무, 정보통신 콘텐츠 등
    - 내수 경기 진작을 통한 혁신적 창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반 마련